

[종합]

올해 불량식품 미회수율 광주·전남 무려 90% 달해

식약청 국감 자료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량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명령을 받은 식품 중 회수되지 못한 것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배포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위해(불량)식품 회수율은 6%에 불과했다. 특히 회수 대상 118개 식품 중 회수율 1% 미만인 것이 37개나 됐으며 이중 23개 식품은 단 1g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쥐치포, 고구마칩 등 8개 위해식품 판정 식품의 회수율이 10.1%로 89.

9%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지난 4월 광주식약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한 생고구집 스낵과자는 1천752kg 중 46.5g만 회수돼 회수율이 2.7%였다. 또 지난 2월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돼 여수시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쥐치포 2천864kg 중 87.1g(3.0%)만 수거됐으며 지난 3월 대장균이 발견돼 회수 명령을 받은 562kg의 쥐치포도 4.3%인 23.9g만 회수됐다. 지난 2월 역시 대장균 양성 반응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H식품의 쥐치포는 1천944kg 중 단 6g도 회수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학자금 대출 급증

경기 침체 장기화 탓... 올 1학기 1만8천명 달해

전국 22%가 등록금 대출... 학자금 신용불량도 8천여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대학 학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소남 의원이 9일 주택 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8만1천983건이던 학자금 융자 건수는 올해 1학기 32만7천261건으로 급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05년 5천921건(149억원) ▲2006년 1만7천548건(486억원) ▲2007년

2만1천613건(64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학기까지 학자금 융자 건수가 1만1천382건(368억원)에 달해 연말까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도 ▲2005년 3천803건(88억) ▲2006년 1만1천922건(277억) ▲2007년 1만4천684건(404억) ▲2008년 1학기 7천465건(217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올해 7만907건(2천988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천956건(2천440억원), 부산 3만999건(1천65억원), 충남 2만8천265건(1천163억원) 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대학생이 등록금을 조달하는 방법 대부분이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비율도 21.8%에 달하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학생 신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 수도 지난해 7월까지 8천745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상 구조가 '귀워팔기'와 '강제 판매',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北·美간 핵 검증 일정 합의 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할 듯

교도통신 보도

미국이 핵프로그램 검증을 둘러싼 북·미협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순에 북한에 대한 테

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통신은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엑스포 D-365 카운트다운’ ‘광엑스포 성공 기원 D-365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작식’이 9일 광주 시청 행정동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박광태(왼쪽에서 다섯번째) 광주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전광판 설치 배경과 광엑스포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국세 4조4천억원 지방세 이양

행안부 추진... 시·도지사협, 지방세 비중 확대 촉구

행정안전부가 연간 4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소득 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바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가 당초 국세 가운데 11조3천억원을 지방세로 이양,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에 비해 61%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세입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방세 목적을 발굴해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면서 “당초 방안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제20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토공 혁신도시 사업 결정 5개월 늦어져 광주·전남등 3곳 294억 추가 비용 발생”

민주 이용섭 의원 국감 지적

토지공사가 혁신도시 사업 추진 결정을 5개월여 지연시킴에 따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87억원 등 3개 혁신도시에서 모두 29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드러났다. 이후 7월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혁신도시 계속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토공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월 공급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3개 혁신도시에서 약 5개월 동안 주택용지 공급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추가로 294억원 발생했으며, 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혁신도시의 추가 금융비용이 141억원,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추가 금융비용이 87억원, 경북 혁신도시 추가 비용은 66억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을 원칙으로 하다가 보니 혁신도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됐다”며 “국토해양발전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혁신도시 사업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은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까지도 공기업 선진화와 맞물려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토해양부가 용지 공급을 유보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7월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혁신도시 계속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토공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월 공급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3개 혁신도시에서 약 5개월 동안 주택용지 공급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추가로 294억원 발생했으며, 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용지

OEM 수입식품 앞면 표기 의무화

2010년 하반기부터

중 발효될 예정이지만 경과 기간을 뒤 실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부터이다. 고시는 OEM 식품 포장지의 앞면에 OEM 제품임을 제품명 옆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OO산 주전자 상표부착(OEM)’ 또는 ‘OO산 OEM 제품’이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환율만 미치라법 없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상속허정승인공고

광 김준호(240807-20520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가1585

공고인: 박영경
한정승인수리일: 2008. 10. 6
공고기간: 2008. 10. 10 ~ 2008. 12. 09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85-1 현대2차 아파트 201-908 박영경 (010-4482-1774)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사는 2008년 11월 4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채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10월 10일
주식회사 장역백정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88-1
청산인 이광일

공장매각

- 위치: 여수시 율하동 1125번지 (여천산업단지내 위험물허가지역)
- 대지: 1326.7㎡ (401평)
- 건물: 제품보관공장 건물있음
- 아세렌, 페놀 판매 LG화학대리점 (SUS 탱크판매)
- 구축물: 페놀저장탱크 80ton 아세렌저장탱크 40ton 현재가동중임
- 대지화시설물 분리 매각도 가능함
- 매각금액: 협의조정

문의처: 011-621-2021

분실

클럽회원증
No. J01-11-0380
광주 C.C
송삼홍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함.

합병 공고

서기 2008년 10월 6일 계획한 현대산업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에이치씨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산업 주식회사는 에이치씨티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에이치씨티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08년 11월 10일까지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0일
“강” 현대산업 주식회사
황순근 등주주 장영리 469-1 대표이사 박윤석
“을” 에이치씨티 주식회사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857-4 대표이사 임종락

상속허정승인공고

광 이종민(470220-20119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가1642

공고인: 박영규 박지영 박민자
한정승인수리일: 2008. 9. 23
공고기간: 2008. 10. 10 ~ 2008. 12. 09
연락처: 고양시 일산동구 통동 1222 일산점동 5차 상원상대빌 501-1108 박지영 (010-2257-3751)

분묘개장 공고(1차)

전라남도 고시 제2003-171호(‘03.10.04)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5호(‘06.11.09)에 의거 대한주택공사 시행하는 **목포 용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묘의 위치	분묘번호
목포시 연산동 : 450-2인, 450-1인, 445-1, 443, 399-1, 399-2, 400, 산43-2, 산43-3, 산44, 404-3, 404-4, 409-1인, 409-7, 409-8, 409-9, 410-14, 410-20, 410-21, 410-22, 411-2, 412-1, 413, 416-2, 416-3, 426-5, 428-1, 429-4, 430-9, 430-10, 430-11, 430-12, 432-2, 435, 470, 474, 475, 475-2, 475-4, 476-1, 482-1, 482-2, 483-8, 483-21, 483-35, 483-36	48기

※ 상기 지번 외 목포용해(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공고기간 : 2008. 10. 10 ~ 2008. 12. 10 (3개월)

3.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개장사유 : 목포용해(2)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나. 개장후 안치장소 : 보현정사(목포시 용해동107-5)
다. 안치기간 : 2009 ~ 2019 (10년간)

4.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가. 성명 : 보현정사
나. 주소 : 목포시 용해동107-5번지
다. 연락방법 : ☎ 061)276-1730

5. 신고처 :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택지보상팀 (☎062-380-0503)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6.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구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지번의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공고기간중 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처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